光州日報

제1806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5월 22일 (음력 4월 18일) 목요일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수도권·지방 공멸한다"

본보 등 한국지방신문협 토론회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음에도 정권 후반들어 추진한 점진적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경쟁력을 오히려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후퇴가 수도권 경쟁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지방 공동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과 지방을 공멸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일보사를 비롯한 전국 9개 유력 지역신문사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등의 주최로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은 지속적으로 집중돼 규제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1960년 20%에서 2006년 48.5%로 늘었고, 2003년 이후 지난 2007년까지 일자리 증가분 98만2천 개 중 91만7천 개(93.4%)가 수도권에 집중된 점을 들었다.

조진형 지방분권 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도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정책자료집을 인용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음에도 점진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일자리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동안 모두 83만6000개가 늘어났으나 지방의 일자리는 오히려 1만2천개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또 "2004년 2월 성장관리권역 내 첨단산업 공장 증설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균형발전정책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도 수도권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며 "이 같은 현안을 중심으로 갈등회피적인 임기응변적 규제완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함에 따라 수도권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구와 산업이 더욱 집중돼 과도한 과밀·혼잡 비용이 발생,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지방 공동화로 이어져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구체적으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2005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성(Global Network Connectivity)은 세계 315개 도시 중 41위를 차지하여 홍콩 3위, 도쿄 5위, 싱가포르 6위에 비해 훨씬 뒤지는 등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마지막으로 "규제완화로 개발과 산업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한 외부효과 때문에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은 더욱 훼손될 수 있다"며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 수도권 규제 수단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산강 황포돛배 30년만에 떴다

21일 오후 나주시 공산면 다야뜰 선착장에서 열린 '영산강 황포돛배 출항식'에서 참석자들이 30년만에 다시 뜬 황포돛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다. 황포돛배는 다야뜰~중촌포(드라마 주몽 세트장)간 왕복 6㎞ 구간에서 운항되며, 다음달 1일부터 유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주 다야뜰~중촌포 6㎞ 운항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도 '탄력'

고려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목포에서 나주 영산포까지 50여㎞를 운항했던 전통 황포돛배가 30여년만인 21일 출항식을 갖고 영산강에 다시 떴다.

특히 황포돛배 출항식을 계기로 관련 단체들이 '영산강 뱃길 복원'을 위한 서명에 나서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영산강 황포돛배 출항식이 21일 오후 박준영 전남지사, 신정훈 나주시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시 공산면 다야뜰에서 개최됐다.

오는 6월 1일 정식 운항에 앞서 마련된 이번 출항식은 과거 영산강을 운항했던 황포돛배의 명성을 되살리고 안전운항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황포돛배 명명식, 나주시립삼현육각공연단 무사운항 기원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출항식에서는 또 나주시뱃길복원추진위원회가 영산강 뱃길 복원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5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영산강 뱃길복원추진위원회' 김창원 자문위원은 "이번 황토 돛배 출항식을 통해 뱃길 복원의 필요성이 여실히 증명됐다"며 "한반도 대운하 개념이 아닌 영산강 치수 차원에서 뱃길 복원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포돛배는 무료 시험운항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유료로 운항된다. 탑승료는 성인 5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3천원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李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 30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또 쇠고기 파문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사과하고 미국과의 사실상 재협상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된 만큼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불신과 편견을 해소해 국가 발전에 총력을 모으자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미 FTA의 조기 비준과 쇠고기 파문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대국민 담화의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FTA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나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17대 국회 임기가 24일 마감하는 점을 감안하면 FTA 비준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조찬 회동을 갖고 17대 국회 임기내 FTA 비준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손 대표가 쇠고기 재협상 등을 촉구하며 사실상 거절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황우석팀 세계 최초 애완견 복제 성공

NYT 보도 … 미국선 10년간 실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미국 연구진이 10년 전부터 시도하다 실패한 개 복제 프로젝트에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재 바이오기업인 바이오아트(BioArts)사는 이날 미국에서 10년전부터 추진돼 온 '미시(Missy) 복제 프로젝트'를 한국의 황우석 박사가 주도하고 있는 수암바이오연구소 연구팀에서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시프로젝트는 미국 아폴로그룹의 회장이자 지네텍 세이빙스·클론(Genetic Savings & Clone)이라는 회사의 설립자인 존 스펄링 박사가 1998년 애완견인 '미시'를 복제해 달라며 230만 달러를 텍사스 A&M 대학에 기부하면서 알려졌다. 미시는 콜리(collie)와 시베리안 허스키(husky) 품종이 섞인 잡종이었다.

그동안 텍사스 A&M 대학 연구진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01년 고양이 복제(CopyCat)에 성공했으나 '미시'를 복제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미시'는 2002년 15살의 나이로 죽었다.

신문은 또 황 박사팀과 미시 개 복제에 성공한 바이오아트사가 다음달까지 '개 복제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개 복제 경매 시초가는 10만달러라고 이 신문은 썼다. /연합뉴스

광주과기원 학부 과정 생긴다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오늘 본회의 상정

광주 '연구 개발 특구' 지정도 이뤄질 듯

광주 과학기술원에 학부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 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22일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극적으로 17대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과학기술원에 학부 과정이 신설,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의 길이 트이는 것은 물론 광주시의 R&D 특구 지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과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법 등 22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 회부된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은 대전지역 법사위원들의 반대가 예상됐으나 17대 국회 폐회가 막바지에 이른데다 일부 위원들이 18대 총선에서 낙선함에 따라 별다른 진통 없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22일 본회의에 상정된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법과 연계돼 처리된다는 점에서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학부 과정이 설립되면서 광주 첨단과학기술 인력 양성, 서남권 과학 인프라 강화, 국가과학기술 영재 교육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또 광주 과기원 학부 과정 신설로 광주의 R&D 특구 지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실기대회

'초등부' 오늘 13시~16시 금호패밀리랜드